

기독인 제헌의원들과 헌법제정* **

이 영 특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목 차 >

- I. 머리말
- II. 기독인 제헌의원
- III. 제헌 과정에서의 기독의원의 역할(1) : 구조적 분석
- IV. 제헌 과정에서의 기독의원의 역할(2) : 내용 분석
- V. 맺음말

I. 머리말

다른 모든 점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군정과 제1공화국 시기는 특별하다. 오늘날도 종종 기독교가 정치와의 관계에서 논란이 되곤 하지만, 특히 “미군정과 제1공화국은 많은 관찰자들에게 실제적인 운영면에서 ‘사실상의 기독교국가’(Christendom)로 비쳐져 왔다.”¹⁾는 언급이 있을 정도로, 국가와 기독교가 상호 지원의 밀접한 관련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 시기 기독교와 정치와의 관계에 주목해 왔다.

이 글은 이들 선행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를 헌법 제정

* 심사위원 : 박인수, 서보건, 최희수

투고일자 : 2010. 2. 22 심사일자 : 2010. 3. 17 게재확정일자 : 2010. 3. 23

** 이 논문은 2007년도 조선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강인철, 한국기독교교회와 국가시민사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10면.

이라는 정치의 결정 과정을 통해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헌법 제정이 갖는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 과정에서의 기독교의 역할 규명과 평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조차도 제헌 과정에 관한 분석은 비껴나 있다. 이 글에서는 과연 기존 연구가 말하는 대로 제헌의 과정에서도 기독교의 밀접한 관련이 나타나는지, 그렇다면 당시 기독교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규범적 국가의 모습의 무엇이며, 그러한 관심이 우리의 헌법에 투영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II. 기독교인 제헌의원

헌법제정 과정에서 기독교인 제헌의원들이 보인 헌법의식과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헌의원 중 누가 기독교인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기독교인이었는지 파악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당장 기독교인을 어떻게 개념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쳐 놓는다 할지라도, 제헌 의원들의 종교 관련 이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헌의원들이 스스로 작성한 이력서에 자신의 종교를 밝히고 있다면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그와 같은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 따라서 누가 기독교인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는 간접자료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논자에 따라 제헌의원 중 기독교인의 수가 달리 이야기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가령, 배민수는 제헌의원 198명 중 37명이 기독교인였다고 보고하는 반면,³⁾ 강인철은 독자적인 조사에 의해 채선거나 보결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원까지 포함한 208명 가운데 21.2%인 44명을 개신교 신자로 분류하고 있다.⁴⁾ 그러나 아쉽게도 기독교인 제헌의원을 망라한 정리된 명단은 제시하

2) 국회의 헌정자료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이력서는 2대 국회의원들부터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3) Pai Min-So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God?*,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농어촌부, 1993[1951]; 강인철, 미군정기의 국가와 교회, 해방 후 정치세력과 지배구조, 한국사회사학회, 1995, 226면에서 재인용.

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독교인 제헌의원들을 추려내기 위하여 여러 이차자료들과 함께,⁵⁾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역대국회의원총람』,⁶⁾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제공하는 제헌의원 프로파일,⁷⁾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한국근현대인물자료⁸⁾ 등에 나오는 이력을 참고하였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는 여러 일차자료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다.

조사 결과, 기독교인으로 파악된 제헌의원의 이름과 선거 당시의 소속 정당, 학력, 직업 및 주요 경력은 부록의 《표》와 같다. 이에 따를 때, 제헌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최초 당선인 198명 중에서 기독교인 제헌의원은 카톨릭계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대략 38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의원의 약 19.2%에 해당한다. 앞의 강인철의 분석이 개신교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추가 당선자까지를 고려한 결과임을 감안하면, 부록의 《표》에 나타난 결과는 강인철의 분석보다는 6-7명 적은 수치이다.⁹⁾ 그러나 제헌과 기독교인이라는 이 글의 주제를 다루기에는 강인철보다는 앞의 배민수가 제시한 수치가 보다 기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배민수가 시간적으로 더 나은 관찰자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그의 관심 방향과 이 글의 관심이 더 근접하기 때문이다. 배민수 자신이 당시 목사로서 누구보다도 기독교적 정체성을 의식하며 정치에 활발히 참여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기독교인 제헌의원을 선거 당시의 소속 정당이나 단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독촉국민회) 13명,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 8명, 대동청년단 2명, 조선민주당 1명, 한국독립당 1명, 교육협회 1명, 민족통일본부 1명, 무소속 11명이다.¹⁰⁾ 이를 전체 의원 대비 소속 정당·단체 비율과 대비해 보

4) 강인철, 위의 책, 177면.

5) 이차자료 중에서는 특히 강인철이 위의 책에서 기독교인으로 거명하는 인사들과, 장동수, 미군정기 한국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 석사논문, 1999, 부록1 <미군정기 정치활동 기독교인들의 경력과 활동 현황> 명단을 주로 참조하였다.

6) 대한민국국회 사무처, 歷代國會議員總覽: 自制憲國會至第五代國會, 1997.

7) <http://www.rokps.or.kr>

8) http://db.history.go.kr/front/dirservice/dirFrameSet.jsp?PRE_ID=6256&pUrl=%2Ffront%2Fdirservice%2Fcommon%2FlistLargeMain.jsp&pCODE=&pType=

9) 한편 제헌 당시 기독교적 정체성을 희미하게라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사까지 넓게 잡아 파악하면 그 수는 약 45명에까지 이른다. 이는 강인철보다 1명 정도 더 많은 수치이다.

면, 독촉국민회의 경우 전체 제헌의원 대비 소속 의원 비율이나 전체 기독교의원 대비 소속 기독교의원 비율이 각각 약 34.3%와 34.2%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민당 소속 기독교인 의원의 경우 기독교인 제헌의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1.1%로, 전체 제헌의원 내 한민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 16.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기독교인 무소속 의원의 경우는 전체 기독교인 의원 중에서 대략 2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제헌의원 내 무소속 의원 비율 약 57.6%의 겨우 절반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인 제헌의원 내 한민당 소속 의원의 비율이 높다는 통계는 미국유학과-기독교인-한민당 사이의 친화성을 주장한 기존의 통념¹¹⁾에 부합하는 결과로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 무소속 의원의 비율이 전체 무소속 의원의 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당시 무소속 의원 중에는 한국독립당이나 중간파에서 선거 불참이라는 지시를 어기고 출마하여 당선된 사례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한민당 등 기존 보수우파 정당이나 단체와 관련이 있는 인사라도 기존 정당의 인기가 낮았기 때문에 무소속을 표방한 경우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 그렇다면 기독교인 제헌의원 중에 기독교인 무소속 비율이 낮아지고 대신 한민당 소속 기독교의원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기독교인 제헌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우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강한 신념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기독교인 제헌의원들의 직업 혹은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원으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등 교육계 경력을 가진 의원이 최소 18명 이상으로 이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제시대 반일운동에 관계하거나 해방 후 정치단체에 소속되어 정치활동을 한 경력 역시 비교적 눈에 많이 뜨인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어느 정도 그들의 정치 지향성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10)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 관계되는 등으로 인해 어느 정당 단체 소속으로 분류하느냐가 자료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각주6의 역대 국회의원 총람에 기초하였다.

11)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 한국민주당연구Ⅱ, 창작과비평사, 1984, 27면; 강인철, 앞의 책 각주3, 168면.

12) 이영록, 우리헌법의 탄생, 서해문집, 2006, 40면.

것 같지는 않다. 소수이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점은 총 38명 중 5명이나 의사 출신이었다는 점이다.¹³⁾ 그러나 미리 말해 두지만, 이들은 제헌 과정에서는 거의 아무런 활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기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학교나 성경학교 경력자가 많이 눈에 띄는 점이 이채로우며,¹⁴⁾ 그 외에는 해외 유학자가 많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특히 제헌의원 중 미국 유학자의 대부분은 기독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사실은 해방 전 미국 유학 경력자의 압도적 다수가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¹⁵⁾이 제헌의원들 사이에도 그대로 타당함을 보여준다. 이 점은 당시 기독교가 미군정의 비호 아래서 부당하게 세력을 확장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거론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당시의 기독교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¹⁶⁾

III. 제헌 과정에서의 기독의원의 역할(1): 구조적 분석

1. 논의 조직에의 참여비율 분석

이 장에서는 헌법 제정과 관련된 국회 조직상에 있어 기독인 제헌의원들의 세력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헌법기초위원회에 대한 구상이 마련된 개원 전 국회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살펴보자. 5.10 총선 후 최초로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가 5월 22일에 비공식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날 모임에는 이승만을 비

13) 부록《표》의 38명 명단에는 속하지 않지만, 의사였던 신현모 역시 기독교계의 경신 중학과 기독교청년회 영어과를 수료했으며,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경력으로 보아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4) 한 기록에 따르면, 제헌국회 내 목사가 1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Rhodes Harry A. and Achibald Campbell,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35-1959*, New York: Commission on Ecumenical Mission and Relations, United Church in the U.S.A., 1965, p.381; 강인철, 앞의 책 각주3, 176면에서 재인용.

15) 강인철, 위의 책, 201면. 김원용, 재미한인 50년사, 위성턴, 1959와 김택용, 재미한인 교회 75년사, 생명의말씀사, 1979도 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용되고 있다.

16)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 교회의 제형성, 서울신대출판부, 2009, 149면.

롯데 약 40여 명의 당선자가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가칭 국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고, 준비위원을 선정할 전형위원으로 신익희, 백관수, 김도연을 선정하였다. 전형위원들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12명의 준비위원들을 선출하였는데,¹⁷⁾ 이중 기독의원들은 김도연, 김상돈, 백관수, 이윤영, 이훈구, 장기영, 장면 등 총 7명이나 되었다.

이 준비위원들이 마련한 국회임시준칙안이 국회의원 예비회의와 개원 첫날 회의에서 약간의 수정과 함께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헌법기초위원회 조직에 관한 구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30인으로 하되, 전형위원 10인을 선출하여 선정하도록 할 것과 위원회에 전문위원 5인 내지 10인과 서기 3인을 두도록 하였다.¹⁸⁾ 초기 개원 준비단계에서 운영의 주도세력에 기독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에 의해 헌법안 논의 구조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회임시준칙상의 헌법기초위원회 구성안이 기독의원들의 정체성과 함수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헌법 제정과 관련한 독촉국민회와 한민당 연합의 사전 포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보인다.¹⁹⁾

국회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는 의장 이승만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의장 2명 가운데 1명인 김동원 역시 장로 직분을 가진 기독인이었다. 제헌국회 내에 기독인의 비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국회 의장단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 암암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국회본회의에서 헌법 심의 시에 이들은 사회를 번갈아 맡으면서 절차를 통한 영향을 행사했다. 가장 민감했던 통치구조에 대한 축조토의 때에 이승만이 사회를 맡아 대부분의 수정안들을 철회시킨 일이라든지,²⁰⁾ 발언시간 제한에 대한 논란,²¹⁾ 헌법 통과 의결정족수와 관련

17) 동아일보, 1948.5.25.

18) 대한민국국회, 제헌국회속기록1, 영인본, 신일문화사, 1999, 3면.

19) 헌법 제정 과정을 이해하는 주요한 분석틀 가운데 하나는 독촉국민회 및 한민당의 우파연합과 소장파 혹은 무소속계로 불린 일부 무소속 의원들 사이의 대립이다. 헌법기초위원회 구성안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 내용 역시 중립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헌법 제정을 주도하려는 독촉국민회와 한민당의 연합세력에 의해 구상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영록,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1948)의 정치적·사상적 역학관계에 관한 분석, 헌법학연구, 제7권 제4호, 2001.12, 34면.

20) 대한민국국회, 앞의 책, 447-448면; 이영록, 제헌과정에서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와 결과, 한국법사학회 엮음, 한국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 민속원, 2008, 262면.

21) 대한민국국회, 위의 책, 278-282면.

한 의사진행상의 논란²²⁾ 등은 그 대표적인 몇 예이다. 또한 국회에서의 제헌 작업은 공식적인 논의의 장뿐만 아니라 막후에서의 조정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의장단은 막후 조정 과정에서 국회 지도자들로 참여할 수 있었다.

헌법 제정에 있어 헌법기초위원회의 구성이 갖는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헌법기초위원회 내 기독교원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먼저 헌법기초위원들을 선정한 전형위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10명의 전형위원 중 이윤영, 윤석구, 허정이 기독교원으로서 약 33.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중 이윤영이 전형위원들의 대표로 활동한 것 같다.²³⁾ 이들에 의해 추천되어 본회의에서 확정된 헌법기초위원은 총 30명 중 김상덕, 백관수, 신현돈, 오석주, 윤석구, 이윤영, 이훈구, 허정, 이렇게 8명이다. 약 26.7%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체 제헌의원 내 기독교원의 비율인 약 19.2%를 훨씬 상회한다.

헌법기초위원의 선정은 대체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30명 중에서 법학을 전공한 위원이 14명이나 되고, 여기에 행정 경험을 가진 자를 포함하면 16명으로 반수를 넘는다. 그런데 기독교인 의원 중에는 법학이나 행정에 관련된 인물 자체가 적었다. 그 적은 인원 중에서 2명이 헌법기초위원으로 선정되었다.²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법학이나 행정 실무와 관련이 없는 기초위원 14명 중 무려 반수에 가까운 6명이 기독교인 의원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기초부위원장으로 이윤영이 호선된 사실²⁵⁾까지를 감안하면, 적어도 제헌과 관련하여 기독교인 제헌의원들의 영향이 실제보다 더 크게 행사될 수 있는 구도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형위원들에 의한 기초위원 선정 보고가 있고난 후, 전남 대성회(大成會) 회장이자 전국 유도회(儒道會) 부회장이었던 조국현 의원이 기초위원 선정에 6대 종교가 무시되었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²⁶⁾도 이런 사정에 기인한 것이었을 것이다.

22) 대한민국국회, 위의 책, 374-377면 중 김동원 국회부의장의 사회발언; 이영록, 앞의 책 각주12, 154-157면.

23) 속기록에 의하면, 전형위원회의 보고를 이윤영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국회, 위의 책, 44-45면.

24) 기독교인 제헌의원 중에서 법학과 관련된 자는 총 5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백관수와 허정은 헌법기초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치영은 국회법기초위원이 됐으며, 김동원은 국회부의장이었다. 오직 일본법학전문학교를 중퇴한 조한백만이 아무런 직책을 맡지 못했다.

25) 대한민국국회, 앞의 책, 67면.

26) 위의 책, 48면.

어쨌든 이상의 통계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제헌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 구조의 요소에 기독교원들이 제헌국회 내에서 실제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활발히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원들이 적어도 국회 개원을 전후해서는 제헌의원들 사이에서 신임을 높게 받고 있었거나, 비기독교인 의원들에 비해 더 강한 지도력 혹은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심의 활동의 빈도 분석

헌법 제정에 대한 기독교인 제헌의원들의 심의 활동의 빈도는 기독교인 제헌의원들의 관심도 내지는 적극적 참여도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원들의 심의 활동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제헌국회의 본회의에서 헌법안 제1독회 때부터 마지막 제3독회 때까지의 헌법안 심의 안전과 관련된 심의 활동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심의 활동은 속기록에 나타난 발언이나 서면질의, 미발표원고, 수정안 대표발의 등의 활동을 포함한 것이다. 반면 사회자로서의 발언과 어떤 제안에 대한 단순한 재청이나 삼청의 의사표시, 혹은 의원석에서의 항의 등 정식 발언권에 의하지 않은 발언은 제외하였다.

결과는 기독교원 중 많게는 7명 정도가 헌법안 안전과 관련하여 단 한 번의 심의 활동도 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된다. 헌법안 심의와 관련하여 속기록상 5회 이상 활동이 발견되는 인물은 14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나마 발언의 대다수는 다음에서 보듯이 단순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심의 활동의 대상 분야별 회수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총강 부분에 대해서 16회,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54회, 권력구조 관련 33회, 경제제도 18회, 기타 부분에 관해서 16회 정도의 활동이 발견되고, 절차와 관련한 활동이 81회로 가장 많다.²⁷⁾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기독교원들이 실질적인 심의 활동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위의 조사에는 이승만과 김동원이 사회자로서 행한 활동이 누락되어 있고, 또한 헌법기초위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심의와 관련하여 찬반 의견표시를 하지 않기로 한 결의에 따라 기독교인 헌법기초위원들이 활동을 자제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의 조사는 많은 기독교원들이 헌법안 심의에 대해 가능하면 침묵하는 쪽을 택했다

27) 한 사람이 한 번에 여러 분야에 걸쳐 발언할 경우 분야별 회수는 각각 1회씩으로 처리하였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빠른 의사 진행을 위해 이들이 발언 등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는 조속한 정부수립을 위해 의사일정을 재촉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에 협조하고자 될 수 있는 대로 발언 등을 삼가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 의원들이 대부분 조속한 정부수립을 재촉했던 보수우파에 속해 있었고, 절차와 관련하여 이들이 행한 상당수의 발언들도 실제로 의사의 조속한 진행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둘째는 기독교인 제헌의원 중에 법학이나 행정, 경제에 경험을 가진 인물이 적었다는 사실과 관련되는 것으로, 헌법안의 내용을 다룰 만한 식견이 부족했다는 점이 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분야별 활동 빈도를 보면, 절차 문제 외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점이 눈에 뜨인다. 물론 본회의가 처음에는 비교적 활발히 토론이 진행되다가, 권력구조에 관한 부분에 들어서면서 이승만의 강압적인 일정 재촉에 토론이 질식되었던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정부형태의 문제가 이익균점권의 문제와 함께 헌법안 심의의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사실이 기독교인 의원들의 관심에 하나의 특징을 부여해 주는 현상임은 틀림없다.

특히 관심의 정도를 조항별로 분석하면,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단일 조항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14회로 파악된 종교에 관한 조항(제12조)이었고, 두 번째로는 12회를 차지한 혼인 및 가정에 관한 조항(제20조)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에 관한 조항(제16조)이었다. 특히 앞의 두 조항은 다른 비기독교인 의원들의 관심이 거의 없었거나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헌법안 심의 활동과 관련하여 기독교인 의원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제헌 과정에서의 기독교인의 역할(2): 내용 분석

1. 종교 문제

앞서 보았듯이, 종교 문제는 본회의 심의 때에 기독교인 의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항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헌법기초위원회 심의 때에도 한

차례 논란이 있었다. 심의의 기초가 되었던 유진오안 제12조는 “모든 인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윤영이 정교분리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여 국교 유무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²⁸⁾ 결국 결론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지만, 이 논란이 단순히 이윤영 개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헌법기초위원회 심의가 종반을 치닫을 즈음, AP통신의 무어 특파원이 국회 동향에 관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종교 문제 등에 관하여서는 종교 출신 의원들은 당파를 초월하여 단결”²⁹⁾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1독회 때부터 기독교인 의원들에 의해 종교 조항의 의미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더니, 제2독회에 이르러 4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제1안은 이남규 의원 외 12인, 제2안은 강옥중 의원 외 11인, 제3안은 원용한 의원 외 11인, 제4안은 서용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였는데, 이 중 2개안의 대표발의자가 모두 기독교인 의원이었다.³⁰⁾ 이 중 제1안에서 제3안까지는 그 취지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남규 의원의 말에 따르면, “똑같은 문제인데 아마 연락이 못 되어서 여러 안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다.³¹⁾

수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제12조 제2항 국교금지 및 정교분리 조항을 삭제하고(강옥중안), 나아가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법률로 보장 혹은 장려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자는 주장(이남규안, 원용한안), 둘째는 종교의 자유를 법률과 공공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하자는 주장(이남규안), 셋째는 제12조 제1항의 신앙 및 양심의 자유에 ‘사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주장(서용길안)이었다.

먼저 첫째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제2독회에서 수정에 찬성 발언을 한 의원이 대표발의자를 포함하여 8명이고, 반대 발언을 한 의원은 4명이었다. 찬성발언자 8명 중 6명이 기독교인 의원으로 파악되고, 반대발언자 중 기독교인 의원

28) 서울신문, 1948.6.10; 조선일보, 1948.6.10.

29) 서울신문, 1948.6.19.

30) 서용길은 이 글에서 기독교인 제헌의원으로서 분류되지 않았지만, 기독교 학교인 배재중과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한때 배재중에서 교사생활까지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역시 기독교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31) 대한민국국회, 앞의 책, 383면. 제2안과 제3안 발의자인 강옥중 의원과 원용한 의원도 역시 제1안과 같은 취지임을 인정하였다. 위의 책, 384면.

은 한 명도 없었다. 기독교인 의원들의 찬성 이유는 우선 원안 제2항의 국교금지 및 정교분리 조항을 삭제해도 종교의 자유 보장에는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남규 의원은 종교의 자유는 이미 원안 제1항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었고,³²⁾ 이윤영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발언하였다.³³⁾ 이미 제1독회 질의응답 때에 권승렬 전문위원도 제2항은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 “실로 현재에서는 연문(衍文)”³⁴⁾에 불과하다고 대답한 바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교분리 규정을 둔다는 것에 일부 기독교인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다. 제1독회 때 목사였던 오택관 의원이 제2항의 의미를 물었던 것³⁵⁾도 그런 의구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떠한 종교를 제압하고자 하는 의도”,³⁶⁾ 혹은 “종교를 경계”³⁷⁾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기독교인 의원들의 우려였다. 신학교 출신이었던 정준 의원은 종교에 적대적인 “소련에서만 국교를 반대한다는 말이 있고 또 패전국가인 일본에서만 이런 헌법이 있는 것을 발견”³⁸⁾할 수 있다고 몰아부쳤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대다수의 기독교인 의원들은 오히려 국가와 종교가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밝힌 것은 황호현 의원이었다. “황폐되어 있는 인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황폐되어진 마음의 발”을 갈기 위해서는 종교가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정안에 찬성한다는 것이었다.³⁹⁾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장면 의원 역시, “국가로서 지극히 중대한 역할을 하는 종교”를 국가가 좀 더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⁴⁰⁾ 그의 생각은 제1독회 대체토론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종교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산을 취득 소유 보관하고 종교적 교육적 자선적 기관을 운영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러한 사업에 관한 면제가 있어야 할

32) 위의 책, 383면.

33) 위의 책, 385면.

34) 위의 책, 235면.

35) 위의 책, 235면.

36) 위의 책, 298면 중 정준 의원의 발언.

37) 위의 책, 383면 중 이남규 의원의 발언.

38) 위의 책, 386면.

39) 위의 책, 387면.

40) 위의 책, 388면.

것이다”⁴¹⁾고 주장했다.

사실 이런 발상은 헌법안 제6조와 관련하여 좀 더 과격한 형태로 논의되기도 했다. 오택관 의원이 제6조에 “신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도의팽창(道義膨脹)을 건국정신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삽입하자는 수정안을 다른 15명의 의원들과 함께 제출했고,⁴²⁾ 한 명씩의 찬반토론에서 정준 의원이 찬성 발언에 나선 것을 볼 수 있다.⁴³⁾ 수정안은 찬성 24명, 반대 96명으로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는데, 찬성자의 주축이 기독교인 의원이었으리라 보아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다만 이 수정안은 그 급진성으로 인해 기독교인 의원들조차 찬성에 가담하는 비율이 적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점에 관한 찬성발언자 중 한 명이 유도회 경북도위원장인 김우식 의원이었다는 점과, 동시에 반대발언자 4명 중 2명인 정도영 의원과 유성갑 의원은 독실한 불교 출신 인사였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주장의 주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대표발의자인 이남규 의원의 설명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와 우리 국민에게 복리를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독을 끼치는 종교를 인정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올시다.”⁴⁴⁾ 이윤영 의원 역시 “국가와 민족에게 해가 되는 그런 종교”는 법률로써 보장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⁴⁵⁾ 그러나 이 수정 내용에 관해서는 표결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이 수정 내용에 대해 불교도인 정도영 의원의 심각한 반론이 있자, 장면 의원이 재빨리 “법률에 배치되고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규정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한 발 물러섰고,⁴⁶⁾ 이를 수정안 발의자인 이남규 의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장면 의원의 의도는 이 문제 때문에 이남규 의원의 첫 번째 수정 내용까지 부결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결국 이남규안은 장면 의원이 제차 수정 제안한 대로 제1항의 내용은 그대로

41) 위의 책, 234면.

42) 위의 책, 363면.

43) 위의 책, 364면.

44) 위의 책, 383면.

45) 위의 책, 385면.

46) 위의 책, 388면.

둔 채, 제2항만을 “국가는 모든 종교상의 행위를 보호한다.”라는 규정으로 대체되었는데, 표결 결과는 재석 169명, 찬성 37명, 반대 82명으로 미결되었다. 한편 강욱중안은 찬성 20명, 반대 98명으로 부결되었고, 원용한안 역시 찬성 1명, 반대 100명으로 부결되었다. 세 안에 찬성한 수를 합치면 총 58명이 된다. 여기에는 일부 중복찬성자나 아주 소수의 비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이 쟁점에 대한 찬성 발언 대부분이 기독교인 의원들이었던 점과 함께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 의원들이 세 안 중 어느 하나에는 찬성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비기독교인 의원들이 종교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 의원들의 주장에 동감하지 않았다는 결론 역시 쉽게 도출된다.

세 번째 수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용길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⁴⁷⁾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의 두 문제와는 다르게 기독교인 의원들의 찬성 발언을 하나도 끌어내지 못하였다. 사상의 자유가 용공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수우파가 대다수인 기독교인 의원들이 수정안에 달가워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가정 및 혼인에 관한 문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할 때까지만 해도 가정 및 혼인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헌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대한 기독교인 의원들의 집요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이어 수정안 제출에까지 이른다.

시발은 권태희 의원과 박순석 의원이 열었다. 헌법안 제8조 평등조항과 관련하여 축첩에 대한 태도 및 남녀평등의 문제로서 결혼 문제를 헌법상에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의를 던진 것이다. 특히 박순석 의원은 “국가의 단위가 되며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구성과 권리 또 결혼 문제 여권(女權) 등에 하등 보장이 없음은 중대한 결함이 아닌가”⁴⁸⁾라며 다소 공격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그것은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전문위원의 답변이 있자, 권태희 의원은 대체토론을 통하여 더욱 거친 언사로 몰아부쳤

47) 위의 책, 385면.

48) 위의 책, 230면.

다. “국민의 반수는 여자”인데, 자손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 문제 여자 문제를 등한시한 것은 “헌법에 기초적인 착오”이며, 축첩이라는 “악독간악한 만행”을 묵과한 것이라는 힐난이었다.⁴⁹⁾ 종교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던 장면 의원 역시 혼인의 성립이나 가정 내 지위에서 남녀동등의 대원칙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거듭었다.⁵⁰⁾

제2독회에 이르러 권태회 의원이 마침내 38인의 동조자를 규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했다. 헌법안 제19조 다음에 “혼인은 남녀동등을 기본으로 하며 가족의 순결과 건강에 관하여서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수정안은 공동발의자인 장면 의원의 보충설명 후에 별다른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일절 개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결과는 많은 의원들이 가정 안에서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편함을 느꼈음을 보여준다.⁵¹⁾ 재석 162명에 찬성 66명, 반대 61명으로 미결이 된 것이다. 권태회 의원의 요청에 따라 바로 제2차 투표가 행해졌으나, 결과는 역시 미결로 결론이 났다.

가결도 부결도 아닌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분명해지자, 의사의 지연을 염려한 조현영 의원이 수정안에 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이윤영 의원이 가결을 독촉하는 발언을 하였고, 드디어 사회를 보던 이승만까지 수정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의사 진행의 필요성, 거기에 이승만의 찬성이 거대한 표의 이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수정안에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찬성으로 돌아서 재석 166명, 찬성 102명, 반대 19명이라는 절대다수로 수정안이 가결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수정안이 최종 확정되는 데는 제3독회에서 한 차례 더 논란을 거쳐야 했다. 헌법기초위원회가 문구 정리를 하면서 원 수정안의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이라는 문구를 “가족의 순결과 건강”으로 고친 것을 장면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어 김봉조 의원이 장면 의원의 의견에 찬동함으로써 원 수정안 그대로 확정되게 되었다.⁵²⁾

위에서 보듯이, 조현영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 수정안의 가결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박순석, 권태회, 장면, 이윤영, 김봉조, 모두 기독교인 의원들이었다. 이로 미

49) 위의 책, 286면.

50) 위의 책, 324면.

51) 이영록, 앞의 책 각주12, 178면.

52) 대한민국국회, 앞의 책, 523면.

루어 볼 때, 수정안 발의자 38명도 대부분 기독교인 의원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⁵³⁾ 흥미로운 점은 발의자 수가 기독교인 의원의 수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물론 의장단에 속한 이승만, 김동원 의원 같이 발의자에 포함되지 않은 기독교인 의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비기독교인 의원들도 수정안 발의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독교인 의원들이 이 수정안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힘을 규합하고자 했다는 경향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3. 교육조항의 문제

교육 문제에 관해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교육 문제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가 표방한 삼균주의의 3대 핵심 영역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1독회 질의응답 때에 교육조항(제16조)에 대한 질의를 주도한 자들은 공교롭게도 기독교인 의원들이었다. 먼저 박순석 의원과 장면 의원으로부터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이상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서면질의가 있었고,⁵⁴⁾ 장면 의원은 이에 덧붙여 사립학교가 관공립학교와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⁵⁵⁾ 이어 황호현 의원은 무상교육에서 무상의 범위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⁵⁶⁾ 질의자 중 맨 마지막의 박영상 의원만이 기독교인 의원이 아니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이도 장면 의원이 유일했다. 의무교육 연한을 초등교육으로 한정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⁵⁷⁾

53) 수정안에 찬성 발언을 한 조현영 자신은 수정안 발의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왕 문제가 나왔으니까” 찬동해 달라는 것이 그의 발언의 결론이었다(위의 책, 444면). 한편 속기록 523면에서는 수정안의 제안자를 계속 ‘권태욱’ 의원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전체 맥락에서 이는 ‘권태희’의 오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54) 위의 책, 232면.

55) 위의 책, 232면.

56) 위의 책, 233면.

57) 위의 책, 324면.

제2독회에 들어 기독교인 의원 중 수정안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는 주기용 의원이었다. 그는 무려 49인의 동조자를 규합하여 원안의 초등교육 앞에 '적어도'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마땅히 교육 장을 신설하여 국가가 교육을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으나, 내외 정세의 급박함을 고려하여 앞으로 의무교육 연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여지를 두는 선에서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이 곁들여졌다.⁵⁸⁾ 수정안은 이 외에도 이종근안, 최태규안, 김정도안, 홍순옥안, 조국현안 등 비기독교인 의원들이 제출한 것들이 있었다. 모두 비슷하게 교육의 균등과 강화를 요구하는 취지의 수정안들이었다. 그러나 표결 결과는 주기용안이 재석 169명, 찬성 87명, 반대 41명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애석하게도 시간 절약을 이유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외에 찬반토론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교육조항 수정 통과에 있어 기독교인 의원들의 역할이나 그 주도성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안설명에 앞서 빚어진 약간의 절차상의 논란을 통하여 그에 대해 약간은 가늠해 볼 여지가 있다. 오택관 의원이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자는 제안을 하자, 김봉조, 주기용, 윤재옥, 장면 등 기독교인 의원들이 줄지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만큼 교육조항에 대한 기독교인 의원들의 관심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오택관 의원도 기독교인 의원이었는데, 그의 변명에 의하면 그 자신도 실은 수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했다.⁵⁹⁾

수정안 발의자만 해도 총 114명에 이른 것이 보여주듯이, 교육 문제가 비단 기독교인 의원들만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제1독회 때의 발언자나 제2독회 때 보인 기독교인 의원들의 관심, 그리고 기독교인이었던 주기용의 수정안 발의와 가결 등을 놓고 볼 때, 기독교인 의원들이 수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많은 기독교인 의원들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실 이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4. 기타 내용상의 문제들

58) 위의 책, 396면.

59) 위의 책, 396면.

앞에서 말한 점들을 제외하고는 기독인 의원들 사이에 비교적 통일된 의견이 표출된 부분은 부칙의 민족정기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윤석구, 송봉해, 박순석, 황호현 의원 등이 반민족행위자 처벌 규정에 해방 이후의 간상모리배(奸商謀利輩)에 대한 처벌이 누락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⁶⁰⁾ 정준 의원 또한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가 아니라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⁶¹⁾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한 세 개의 수정안 중 대표 발의자로 나선 기독인 의원은 없으며, 비교적 활발했던 찬반토론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 경우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 표결에 있어서도 원안 통과에 반대한 수는 34인에 불과한데, 찬반토론 과정을 보면 비기독인 의원들도 상당수 원안 반대에 참가했을 것이 짐작되므로, 민족정기에 강한 입장이 기독인 의원들의 대체적인 경향이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⁶²⁾

그 외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기독인 의원들의 활동에 뚜렷한 경향이 탐지되지 않는다. 가령 제헌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정부형태 문제만 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비기독인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에 비하여 발언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입장도 서로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준과 윤재옥 의원은 내각책임제를 주장했지만,⁶³⁾ 송봉해 의원은 강력한 대통령제 지지자였다.⁶⁴⁾ 허정 의원 역시 헌법기초위원회 막판에 내각책임제 헌법안을 대통령제로 번안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⁵⁾ 대통령 선거 방식과 관련해서도 윤석구, 이훈구, 권태희, 윤재옥 의원 등은 직접선거를 선호했던 것 같고,⁶⁶⁾ 허정, 송봉해, 정구삼, 김봉조 의원 등은 간접선거를 주장했다.⁶⁷⁾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60) 위의 책, 274면.

61) 위의 책, 298면.

62) 강인철은 오히려 기독교 교회들의 정치 참여 방향은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강인철, 앞의 논문 각주1, 210면). 그러나 교회 전체의 입장을 떠나 제헌국회 내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이 말은 지나친 것이다. 일제 잔재 청산 문제에 관한 기독인 제헌의원들의 입장은 역시 개인에 따라 달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63) 대한민국국회, 앞의 책, 298면.

64) 위의 책, 300면.

65) 경향신문, 1948.6.23.

66) 서울신문, 1948.6.13; 조선일보, 1948.6.13; 대한민국국회, 앞의 책, 244, 458면.

67) 서울신문, 1948.6.13; 조선일보, 1948.6.13; 대한민국국회, 위의 책, 300, 329, 460면.

의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건으로 주장했지만, 이운영 의원은 그에 반대했고,⁶⁸⁾ 황두연 의원은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주장했다.⁶⁹⁾

제헌 과정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쟁점이었던 이익균점권 삽입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구, 정준, 이유선, 윤재옥 의원 등이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했으나,⁷⁰⁾ 백관수, 김도연, 이남규 의원 등은 그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이었다.⁷¹⁾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정체성보다는 소속 정당이나 단체, 혹은 개인적 배경 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제헌 과정에서 기독교인 제헌의원들이 보인 활동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독교인 제헌의원들이 국회 의장단 및 헌법기초위원회 등 논의 구조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위치에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반면 국회본회의에서의 헌법안 심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몇몇 조항을 제외하고는 관심이나 활동이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독교인 제헌의원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은 종교조항, 혼인 및 가정에 관한 조항, 교육조항이었다.

종교조항은 기독교인 의원들이 정교분리를 규정한 원안에서 국가가 종교를 보호 혹은 장려한다는 규정으로 수정하려 집중적인 노력을 펼쳤으나, 대다수 비기독교인 의원들의 냉담한 반응에 의해 노력이 좌절되었다. 원안에 없던 혼인 및 가정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자는 주장 역시 처음에는 주로 기독교인 의원들만의 관심사에 머물렀으나, 종교조항의 수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기독교인 의원들의 거부감이 적었다. 그 결과 그 자신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의장이었던 이승만 등 국회 내 지도급 인사들의 찬성 독촉이 의사 지연에 대한 우려와 결합하여 마침내는 국회 내 다수의 찬성을 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조항과 관련해서는 의무교육을 강화하거나 그 연한을 확대하는 데 기독교인 의원들의 관

68) 대한민국국회, 위의 책, 464면.

69) 위의 책, 466면.

70) 조선일보, 1948.6.19; 대한민국국회, 위의 책, 284, 430, 435면.

71) 조선일보, 1948.6.19; 대한민국국회, 위의 책, 416, 420면.

심이 집중되었다. 이런 노력은 의무교육의 연한을 초등학교로 규정한 원안에서 '적어도' 초등학교로 한다는 수정안 제출로 이어졌는데, 이 문제는 이미 비기독인 의원들에게도 충분한 공감을 얻고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수 있었다.

이상의 문제 외에도 개별적으로 기독인 의원들이 관심을 표명한 쟁점들이 있었으나, 거기에 기독인 의원이란 표식과 결부시킬 만한 뚜렷한 경향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정체성보다는 소속 정당이나 단체, 혹은 개인적 배경 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기독인, 제헌, 종교조향, 교육조향, 혼인 및 가정에 관한 조향

< 부록 >

연번	이름	정당/단체	학 교	직업 및 주요 경력
1	권병노	독촉국민회	의성군 사립계 신학교	의사
2	권태희	무소속	일본동지사대학 신학과	목사, 김천중학교 교장
3	김도연	한민당	게이오대, 아메리칸대 경제학박사	2.8독립선언과 조선어학회 사전으로 옥고, 연희전문 교수, 입법의원 의원, 조선흥업회사 사장, 한민당 총무
4	김동원	한민당	일본 호우세이대	장로, 미군정장관 고문, 평양대성학교 장 등 교육계 종사, 한민당 총무
5	김봉조	교육협회	대구계성중, 평양숭실전문	김천여중 교장, 경상북도 학무과장 등 교육계 종사
6	김상덕	민족통일본부	와세다대 정경학부 중퇴	2.8독립선언으로 옥고, 조선민족혁명단 중앙집행위원, 임시의정원 의원, 임정학무부 차장, 경신중학교장, 입법의원 의원
7	김상돈	무소속	메이지대 신학부	공명학교 교원, 재미한국인국민회 교육부장, 조선기독교장로회총회 농촌부 간사
8	나용균	한민당	와세다대 정치학부	임정의정원 의원, 한민당 사무국장
9	박순석	무소속	경성신학교	목사
10	백관수	한민당	경성전문, 메이지대 법과	2.8독립선언으로 옥고, 기독교청년회 활동, 동아일보 사장, 입법의원 의원, 한민당 총무
11	백남채	한민당	북경대학	장로, 대구계성중 교감, 입법의원 의원
12	손재학	독촉국민회	피어선성경학교 중퇴	사립대성학원 교원, 동아일보 지국장, 잡지 인도사 창간, 정치사회단체 활동
13	송봉해	독촉국민회	세브란스의전	경성영신소학교 교원, 3.1운동 관련 투옥, 원산기독교청년회장, 의사
14	신현돈	독촉국민회	경성의전	의사, 대동청년단 무주군단장
15	오석주	독촉국민회	평양신학교	목사, 3.1운동으로 투옥, 동아일보 지국장
16	오택관	한독당	평양신학교	목사, 독립운동
17	원용한	대동청년단	협성신학교	목사, 여흥학교 설립, 양정학교장
18	윤석구	무소속	한영중학	장로, 독립군 참여, 구암동여학교 교사, 입법의원 의원
19	윤재근	무소속	배재중	장로, 강화군 화도면장, 이산공민학교 설립
20	윤재옥	대동청년단	피어선고등성경학교	치과의사, 대한노총 고문

21	윤치영	한민당	와세다대학 법과,아메리칸 대학	임정 구미위원부 위원, 일제 귀족원 의원
22	이남규	독촉국민회	평양신학교	목사, 입법의원 의원
23	이승만	독촉국민회	배재학당, 하바드대, 프린스턴박사	임정 주석, 민주의원 의장, 독촉국민회 총재
24	이영준	한민당	세브란스의전, 토교대 의학박사	의사, 세브란스의전 교장
25	이유선	독촉국민회	배재중	구산진영학원 설립, 성서조선 사건으로 투옥
26	이윤영	조선민주당	협성신학교	목사, 봉천운산보통학교 교장, 조민당 부당수
27	이종순	독촉국민회	조선남감리교양성소 수료,	3.1운동으로 투옥, 호산기독교청년회 총무, 농업 및 토목 종사
28	이훈구	독촉국민회	토교대, 위스콘신 농학박사	조선일보 부사장, 미군정청 농무부장
29	장기영	무소속	주오대 정경과, 비틀러대 정치과	미군으로 참전, 임정 위싱턴 주재 구미위원
30	장면	무소속	맨하탄카톨릭대 문학부	동성상업학교장, 계성국민학교장, 카톨릭청년회장, 조선교육심의회 위원, 입법의원 의원
31	정구삼	독촉국민회	한성외국어학교	신증신문 기자, 천진한국교민회 사무국장
32	정우일	무소속	계성중학	의성읍장
33	정준	무소속	평양신학교 연구과 수료	금릉원학원 설립, 기독교청년회 총무, 교육활동
34	조한백	무소속	전주사범학교	대동신문 전북지사장, 회사 경영
35	주기용	무소속	오산중, 토교고등사범 수학과	오산중학교장, 미군정청 보통교육국장
36	허정	한민당	보성전문 법과	임시의정원 의원, 재불한인거류민회장, 삼일신보 사장
37	황두연	독촉국민회	신홍중, 일본 법학전문학교 중퇴	장로, 영천학교 교원,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 순천 부읍장, 순천기독교연합회장
38	황호현	독촉국민회	부석보통학교	보통문관시험 합격 후 관리생활

참 고 문 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강인철, 한국기독교교회와 국가시민사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강인철, 미군정기의 국가와 교회, 해방 후 정치세력과 지배구조, 한국사회사학회, 1995.

김원용, 재미한인 50년사, 워싱턴, 1959.

김택용, 재미 한인교회 75년사, 생명의말씀사, 197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db.history.go.kr/front/dirservice/dirFrameSet.jsp?pREC_ID=6256

&pUrl=%2Ffront%2Fdirservice%2F

Fcommon%2FlistLargeMain.jsp&pCODE=&pType=

대한민국국회, 제헌국회속기록1, 영인본, 신일문화사, 1999.

대한민국국회 사무처, 歷代國會議員總覽: 自制憲國會至第五代國會, 1997.

대한민국헌정회, 국회의원프로필: <http://www.rokps.or.kr>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 한국민주당연구Ⅱ, 창작과비평사, 1984.

이영록,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1948)의 정치적·사상적 역학관계에 관한 분석, 헌법학연구, 제7권 제4호, 2001.12.

이영록, 우리헌법의 탄생, 서해문집, 2006.

이영록, 제헌과정에서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와 결과, 한국법사학회 역음, 한국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 민속원, 2008.

장동수, 미군정기 한국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 석사논문, 1999.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 교회의 재형성, 서울신대출판부, 2009

Pai Min-Soo,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God?*,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농어촌부, 1993[1951].

Rhodes Harry A. and Achibald Campbell,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35-1959, New York: Commission on Ecumenical Mission and Relations, United Church in the U.S.A., 1965

[Abstract]

Christian Members of the Constituent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nstitution

Lee, Young-Lok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Chosun University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hristian members of the Constituent Assembly(CMCA), relatively more than non-christian members, assumed the important positions such as chairman and vice chairman of the Assembly and constitution drafting committees, which could influence the structure of discussion. On the contrary, their substantial activities were relatively less seen, except for in discussion of religion, marriage & family, and education clause.

Regarding religion clause, CMCA made concentrated efforts to revise the separation of the state and religion on the original draft. They thought that the state should protect and encourage religion. However, their revised bill was voted down because of the animosity of non-christian members. CMCA also tried to insert marriage & family clause. At first stage, interests in this clause was likewise limited mainly to CMCA, but with less animosity of non-christian members. In result, the revised bill could nearly pass, thanks to the repetitive urges of leading members in the Assembly like the chairman and sincere christian, Seung-Man Rhee. CMCA's another effort was concentrated on extending the period of the compulsory education which was fixed to elementary school on the original draft. CMCA's revised bill on this issue received the support of the absolut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ssembly, and easily passed.

There were, of course, other issues CMCA concerned about. However, they didn't seem to be connected with the identity of christians. CMCA, rather, took various positions on those issu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political and personal background.

Key words : Christian,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nstitution, Religion Clause, Marriage & Family Clause, Education Clause